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이 원 진

(서울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급탈출 중에서도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넷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을 나누어 보면, 높은 우울수준은 탈출 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울, 수급탈출, 수급진입

### 1. 서론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과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는 수급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미국의 경우 1996년 복지개혁을 통해 수급기간 제한을 도입하여 탈수급을 적극적으로 강제하면서 수급자의 우울이나 물질남용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노동윤리와 빈곤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급자의 정신·임상·행동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이다(Kalil, Corcoran, Danziger, Tolman, Seefeldt, Rosen and Nam, 1998; Jayakody, Danziger and Pollak, 2000).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수급자의 열악한 정신건강이 탈수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취약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기간 제한을 면제하고 재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반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관리당국의 철저한 스크리닝

(screening) 등을 통해 중독자를 적발하고 급여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Metsch and Pollak, 2005).

이에 미국에서는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수급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사회적 원인(social causation) 가설에서는 수급, 빈곤과 같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보지만, 사회적 선택(social selection) 가설에서는 열악한 정신건강으로 인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은 원인에 개입하여 결과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국에서는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지위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국내에서는 수급동태에 대한 연구,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두 가지가 모두 매우 드물다. 빈곤 분야 연구자들의 일부 수급동태 연구(박능후·유진영·임완섭·백학영, 2004; 강신욱·이현주·구인회·신영진·임완섭, 2006; 이원진, 2010)에서는 주로 인적자본 등 경제적 특성에 주목할 뿐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정신보건 분야 연구자들의 일부 연구(박상규, 2001; 윤명숙, 2001; 이용표, 2001)에서는 수급자의 정신건강을 분석하였지만, 단순히 횡단적 상관관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할 뿐 종단적 인과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처럼 실증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조 건부 수급자의 우울, 음주 문제 등이 자활사업 참여와 탈수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동우·이선혜·김윤희·노대명·이용표·황태연·이선영·강서이, 2002)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과 수급지위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Dooley and Prause(2002)를 따라 두 가지 방향의 인과관계, 즉 수급 진입/탈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이 수급 진입/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우울에 집중하는 것은 우울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 보편적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이용표, 2001).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모형 설정을 위한 기초 정보가 적다는 점, 종단 자료에 포함된 시점이 많지 않아 분석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확인적(confirmatory)이라기보다는 탐색적(exploratory)이다. 본 연구는 우울과 수급지위 변화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향후 더욱 정교한 후속연구를 위한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Faris and Dunham(1939, Dooley and Prause, 2002에서 재인용)이 빈곤이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한 이후 수십 년 동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적 원인-사회적 선택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먼저 사회적 원인 관점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비롯된 환경적인 역경과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문제를 촉발시킨다고 본다. 반면 사회적 선택 관점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하게 만들거나 혹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터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이에 외국에서는 그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는데, 어느 한 쪽의 가설을 지지하는 일치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두 가지 가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ohrenwend and Dohrenwend, 1981; Timms, 1996). 이러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적 원인-사회적 선택 논쟁에서는 어느 한 쪽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각의 가설이 어떤 사실을 얼마만큼 설명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공공부조 수급과 우울의 관계 역시 사회적 원인-사회적 선택 논쟁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급지위의 변화와 우울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사회적 선택과 사회적 원인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논리적으로 <표 1>과 같은 네 가지 연구문제가 도출된다.

<표 1> 연구문제

이론적 관점	연구문제
사회적 원인 (social causation)	수급진입이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가?
	수급탈출이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가?
사회적 선택 (social selection)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키는가?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확률을 감소시키는가?

### 1) 수급진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급진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우울수준이 증가한다. 사회 스트레스(social stress) 모델에서는 사회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스트레스적 생활사건(stressful life event)과 스트레스적 생활조건(stressful life condition)과 같이 개인의 외부에 있는 사회적 환경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본다(김인숙, 1992). 빈곤층은 실업, 고용 불안정, 저임금,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신체적 위협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chronic stressor)이 된다(이상문, 2008).

둘째, 빈곤진입과 별개로 수급진입 자체가 우울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의 핵심 원인은 공공부조에 따르는 스티그마(stigma)이다. Nichols-Casebolt(1986)에 따르면 소득조사가 동반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심리적 안녕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영향을 미친다. 첫째, 소득조사 프로그램은 수급자를 사회적 규범과 가치로부터 벗어난 일탈자(deviant)로 규정한다. 수급자는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탈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가 수급자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스스로 내면화하게 된다. 둘째, 소득조사 프로그램의 복잡한 행정 절차는 수급자의 무감정(apathy)과 무력감(powerlessness)을 유발한다. 사회는 끊임없이 부정수급을 의심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통해 수급자격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규칙과 규제를 부과한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이 이해하

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급진입의 성격에 따라 수급진입이 우울수준을 개선시킬 가능성도 있다. 빈곤 진입과 수급진입을 동시에 경험하지 않고 수급진입 이전에 이미 빈곤했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구제(relief)'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Nichols-Casebolt, 1986).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환산액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크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재산 소진, 가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수급자 측면의 변화,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최저생계비의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측면의 변화로 인해 수급에 진입하여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우울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급진입의 성격에 따라 수급진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비빈곤 상태에서의 수급진입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증가와 스티그마로 인해 우울수준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빈곤 상태에서의 수급진입의 경우에는 스티그마가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경제적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가 상쇄하여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 2) 수급탈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급탈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빈곤탈출을 동반한 수급탈출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우울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둘째, 스티그마와 지속적인 행정적 감시로부터 벗어나 우울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근로소득을 증가시켜 탈빈곤에 이르는 탈수급을 전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탈수급 이후 오히려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는 행정적 수급탈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원진(2010)은 김미곤 외(2008)의 개념을 빌려 수급탈출 이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빈곤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제도에서만 벗어난 탈제도적 수급탈출을 구분하였다. 탈빈곤적 수급탈출은 취업이나 근로 증대 등 주로 노동시장을 통한 수급탈출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탈제도적 수급탈출은 엄격한 수급자격 기준, 모니터링 제도와 같은 행정시스템 하에서 수급자격 심사 결과가 달라지거나, 은폐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가 적발되는 등 주로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수급탈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 수급탈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취업 등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우울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반면 탈출 이후에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중지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오히려 우울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 3) 우울이 수급진입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수급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높은 우울수준은 개인의 경제적 기회를 악화시켜 빈곤진입확률을 높이고, 이어 수급진입확률을 높인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교육수준이나 숙련도와 같은 인적자본을 침식하여 취업 가능성과 임금수준을 감소시킨다. 또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근로동기를 감소시켜 비취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경우에는 결근율을 높이거나 근로의 질을 감소시켜 생산성의 손실을 가져온다(Kuruville and Jacob, 2007).

둘째, 높은 우울수준은 빈곤진입과 별개로 수급진입확률을 높일 수 있다. 수급에 따르는 스티그마의 존재는 수급참여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Moffit, 1983). 따라서 수급자격이 있는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스티그마 때문에 그 일부는 수급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울수준이 높을 경우 사회적 일탈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고 스티그마에 대한 저항감이 적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수급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공부조의 행정적 시스템은 근로윤리와 같은 사회적 규범을 강요하면서 근로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순응을 강요한다. 이러한 '관료적 자격박탈 시스템(bureaucratic disentanglement system)'은 복지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시스템의 규칙을 따를 수 없는 빈곤층을 시스템에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Lipsky, 1984).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 시 질병이 없고 근로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수급신청을 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이태진·홍경준·김태완·최현수·김문길·김선미·김사현·최옥금·우선희·김효진·강성민, 2007).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층은 수급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와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하고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울수준이 높은 빈곤층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여 수급진입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높은 우울수준은 비빈곤 상태에서의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미 빈곤한 상태에서의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 4) 우울이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우울수준이 높으면 근로 가능성과 임금수준이 낮아져 빈곤탈출확률이 감소하고, 빈곤탈출이 수급탈출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때, 이어 수급탈출확률이 감소한다. 둘째, 우울수준이 높은 수급자는 자활의지가 미약하여 수급탈출확률이 낮다.

이 중 후자는 복지 의존성(welfare dependency) 논란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수급자의 심리적 특성과 복지 의존의 관계는 Bane and Ellwood(1994)가 기대 모형(expectancy model)의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기대 모형에 따르면 수급자는 거듭된 실패의 과정을 거쳐 수급에 진입하면서 자신감과

통제력을 상실하여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의지 정도가 자활사업 참여의 적극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알코올남용이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태가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서동우 외, 2002).

그런데 우울이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수급탈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우울수준은 탈빈곤을 동반하는 수급탈출에는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탈출 이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경우에는 이상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논의한 엄격한 '관료적 자격박탈 시스템' 하에서는 우울수준이 높은 수급자가 공공부조 시스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 3. 선행연구 검토

#### 1) 외국의 선행연구

미국에서는 1996년 복지개혁을 전후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다. 선행연구 중 수급자의 우울만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를 같이 소개한다.

먼저 복지개혁 이후 Danziger et al.(1998)이 수급자의 약 35%가 우울, PTSD, 불안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공공부조 수급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Siefert et al.(2000), Kalil, et al.(2001) 등은 수급자의 우울수준이 높다는 현상을 기술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지원 등이 수급자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수급자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수급자의 자활 및 수급탈출과 정신건강 문제를 연결지어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예를 들어 Jayakody et al.(2000)은 수급자의 약 19%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활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Kalil et al.(2001), Danziger et al.(2002) 등에서 우울, 물질남용 등이 수급자의 취업, 수급탈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종단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Kaestner(1998), Schmidt et al.(1998), Schmidt et al.(2002), Lewis et al.(2006), Zabkiewicz and Schmidt(2007) 등이 있다. Kaestner(1998)는 현재의 약물사용이 미래의 수급진입확률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Schmidt et al.(1998)은 현재의 물질남용이 향후 6년간의 수급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AFDC 수급자들에서는 물질남용이 수급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GA 수급자의 경우에는 물질남용이 반복수급패턴을 강하게 예측함을 밝혔다.

Schmidt et al.(2002)은 수급탈출 유형을 취업을 통한 탈출(work exit), 가족구성의 변화를 통한 탈출(family exit), 행정적 탈출(administrative exit)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약물의존이 취업을 통한 탈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족의 해체로 인한 탈출과 행정적 탈출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wis et al.(2006)은 직접적으로 수급탈출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수급자의 우울이 고용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정 수준 이상(moderate and severe)의 우울은 수급자의 고용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Zabkiewicz and Schmidt(2007)의 분석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에 따라 복지에서 근로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가운데, 우울은 구직노력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근로를 통한 수급탈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들이 정신건강 문제가 수급지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Nichols-Casebolt(1986)는 반대로 수급지위 변화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확인되었지만, 수급탈출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Dooley and Prause(2002)는 AFDC 수급 진입/탈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건강이 수급 진입/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알코올남용이 수급진입확률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우울은 수급진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알코올남용과 우울이 수급탈출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수급진입은 알코올남용과 우울, 특히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수급탈출이 알코올남용 증상을 낮추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수가 작아 결과를 신뢰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수급탈출이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과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그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함의를 찾아보자면, 대체로 수급진입이 수급탈출에 비해 정신건강의 변화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또한 수급탈출의 성격에 따라 정신건강과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은(Schmidt et al., 2002) 수급탈출의 유형을 구분한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2) 국내의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01년 하반기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재활동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수급자의 정신건강 특성을 분석하는 몇몇 연구들이 제출되었다(박상규, 2001; 윤명숙, 2001; 이용표, 2001). 이들의 연구들은 대체로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박상규·이병하(2004)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일반직장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층이 일반인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신체화, 우울, 공포불안 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수급자의 정신건강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상당히 드물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박영란·강철희(1999)는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정신건강 특성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고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자립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은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조건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단과 수급자 간의 능력 및 적성의 조화, 의견반영 등의 요인이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록(2003) 역시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활사업의 성과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백학영·고미선(2007)은 갑자기 수급자로 전락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빈곤층의 경우 우울과 불안, 심리적 공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자활사업이 이들에게 심리적 치유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급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이 자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태진 외(2004)는 우울 변수를 포함하여 수급동태를 분석한 유일한 연구이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2~2003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탈출과 진입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우울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는데,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전반적인 수급지위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는데는 많은 참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울의 영향을 이론적 검토 하에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울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탈출과 진입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처럼 국내의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소수 연구들이 수급과 우울의 횡단적 상관관계를 보고 하였지만,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후속 연구로 보완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과 우울의 단순 상관관계도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4. 연구 방법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된 사회적 원인-사회적 선택 논쟁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분석 전략이 개발되어 왔다. 기본적인 전략은 횡단 자료를 분석하되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이지만, 역방향의 인과관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전략은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순서를 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차를 두어 현재의 독립변수가 미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Kaestner, 1998; Schmidt et al., 1998; Dooley and Prause, 2002). 이 방식은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해석이 간단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두 시점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변화는 분석에서 누락되거나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 시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



지는 변화를 포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건사 분석이나(Schmidt et al., 2002), 성장곡선 분석(growth curve analysis)이(Montoya et al., 2002)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건사 분석이나 성장곡선 분석은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한 후의 심층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지만, 분석하는 패널 자료의 웨이브 수가 많지 않고, 우선 두 방향의 인과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차를 두어 분석하는 일반적인 접근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이다. 분석단위는 개인이며, 우울, 취업형태 등의 정보가 조사된 만 15세 이상 개인이 분석대상이 된다. 수급지위는 수급가구에 속한 구성원이면 수급으로 정의한다. 수급진입은 비수급에서 수급으로의 변화로, 수급탈출은 수급에서 비수급으로의 변화로 정의한다. 통제변수로 활용되는 빈곤지위는 가구가처분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보다 작으면 빈곤한 것으로 정의한다. 우울은 지난 일주일간의 심리상태를 묻는 CES-D 척도 11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각 문항에 대해 0, 1, 2, 3의 4가지 중의 하나로 응답하게 한 것을 합산하여 0~60점으로 환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으며,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연도에 따라 .86~.89으로 나타났다.

시간순서를 통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측정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지위는 각 년도 12월 31일에 측정되고, 빈곤지위는 각 년도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수급진입/탈출은 2개 시점에서의 수급지위 변화로 측정된다. 우울은 조사시점 직전 1주일 간의 심리상태를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사년도에 따라 측정시점이 상이하다. 1차년도에는 2006년말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2차년도에는 2007년 4~7월, 3차년도에는 2008년 4~7월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같은 웨이브의 변수라 하더라도 측정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간순서를 정확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자료의 웨이브가 아니라 실제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선행하도록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급진입/탈출의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성격에 따라 우울과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진입은 비빈곤상태에서의 진입과 빈곤상태에서의 진입으로, 수급탈출은 수급탈출 후 빈곤한 경우와 빈곤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sup>1)</sup> 그 외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 기준시점은 <표 2>에 제시하였다.

1) 비빈곤/빈곤 상태에서의 진입은 2006년에 비빈곤/빈곤한 2006년말 비수급자가 2007년말 수급자인 경우를 말한다. 한편 수급탈출 후 비빈곤/빈곤한 경우는 2006년말 수급자가 2007년말 비수급자이고 2007년 비빈곤/빈곤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간순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8년 비빈곤/빈곤한 경우로 정의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4차년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와 같은 방식을 택했다.

〈표 2〉 분석변수의 변수 값과 측정 기준시점

변수명	변수 값	측정 기준시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급지위 <sup>1)</sup>	비수급, 수급	2005년 12월 31일	2006년 12월 31일	2007년 12월 31일
빈곤지위	비빈곤(기준), 빈곤	2005년 1년	2006년 1년	2007년 1년
수급진입1	비수급지속(기준), 수급진입	2개 시점에서의 수급지위 변화를 확인하여 측정 단, 수급진입 이전 빈곤상태는 2개 시점 중 전시점을 기준으로 측정		
수급진입2	비수급지속(기준), 비빈곤상태에서 수급진입, 빈 곤상태에서 수급진입			
수급탈출1	수급지속(기준), 수급탈출	2개 시점에서의 수급지위 변화를 확인하여 측정 단, 수급탈출 이후 빈곤상태는 2개 시점 중 후시점을 기준으로 측정		
수급탈출2	수급지속(기준), 수급탈출 후 비빈곤, 수급탈출 후 빈곤			
우울	11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0~60점으로 환 산한 연속변수	2006년 11월 1일 ~12월 30일	2007년 4월 25일 ~7월 19일	2008년 4월 13일 ~7월 10일
성	남성(기준), 여성	2005년 12월 31일	2006년 12월 31일	2007년 12월 31일
연령	39세이하 청년(기준), 40~64세 중장년, 65세이상 노인			
교육수준	고졸 미만(기준), 고졸 이상			
신체건강상태 <sup>2)</sup>	나쁘지 않은 편(기준), 나쁜 편			
결혼지위 <sup>3)</sup>	유배우(기준), 무배우			
6세 이하 아동	없음(기준), 있음			
취업형태 <sup>4)</sup>	비취업(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 영업자			

주: 1) 수급자는 수급가구의 구성원으로 정의하였고, 수급가구는 일반수급과 조건부수급뿐만 아니라 의료  
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가구,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포함한다.

2)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를 '나쁘지 않은 편'으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  
이 아주 안 좋다'를 '나쁜 편'으로 정의한다.

3) '무배우'는 이혼, 사별, 별거, 미혼, 비해당을 포함한다.

4) '임시·일용직'은 자활 및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고용주·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비취업'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울과 수급의 상관관계를 횡단적으로 확인한다. 측정시점이 유사한  
2006년 11~12월 우울수준과 2006년 12월 31일 수급지위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우울과 수급  
지위 변화의 상관관계를 종단적으로 기술한다. 파악가능한 모든 시점에서의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수  
준 변화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네 가지 가설을 검증한다. 모형을 설정하는 기본 원칙은 독립변수와 통제변  
수가 종속변수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순서의 원칙과 변수들이 측정된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네 가지 가설별로 분석 모형을 만들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모형 개념도

첫째, 수급진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말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2006년 11~12월 우울수준을 통제했을 때 2007년말 수급 여부가 2008년 4~7월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OLS 회귀모형으로 분석한다.<sup>2)</sup> 이때 수급진입은 2007년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통제변수인 2006년 11~12월 우울수준은 수급진입 이전에 측정되었고 종속변수인 2008년 4~7월 우울수준은 이후에 측정되어 시간순서가 적절하게 모델링된다.<sup>3)</sup> 그리고 통제변수인 빈곤지위는 2006년 값을, 기타 변수는 2006년 말 값을 투입한다. 둘째, 수급탈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첫째 모

- 2) 수급진입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전시점의 우울수준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는, 전시점의 우울수준이 수급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후시점의 우울수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시점의 우울수준을 통제하지 않으면 허위관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점의 우울수준을 통제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전시점과 후시점에 나타난 우울수준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파악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때 종속변수를 후시점의 우울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시점과 전시점의 우울수준의 차이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두 모형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전시점 우울수준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변수의 영향은 동일하게 추정된다. 한편 두 시점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의 차이가 종속변수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1차 차분(first-difference) 패널 모형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 3) 단,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4월~7월 사이에 수급지위 변화가 발생한다면(intervening event) 종속변수에 미치는 수급진입의 영향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지위 변화의 역동성이 심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셋째, 우울이 수급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말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2006년 11~12월 우울수준이 2007년말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허위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1시기 수급지위를 통제해야 하는데, 이는 비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제된다. 빈곤지위는 2006년 값을, 기타 통제변수는 2006년말 값을 투입한다. 넷째, 우울이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셋째 모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상의 네 가지 분석에서는 수급진입/탈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한 후, 다시 수급진입/탈출의 유형을 구분하여 투입한다. 수급진입/탈출의 유형을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투입할 때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한다.

## 5. 분석 결과

우선 우울과 수급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표 3>에서는 비수급 집단과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우울점수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점수인 16점 이상인 집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비수급 집단에서는 19.4%인데 비해 수급 집단에서는 62.5%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 $p<.001$ ). 다음으로 우울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비수급 집단은 8.764점, 수급 집단은 21.541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즉, 횡단적으로 비수급 집단에 비해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다.

<표 3> 비수급 집단과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 비교

구분	우울점수가 16 이상인 비율 (%)	우울점수 평균 (표준편차)	
비수급 집단 (N=11,057)	19.4	8.764 (9.520)	t=-22.459 (p<.001)
수급 집단 (N=602)	62.5	21.541 (13.782)	
전체 (N=11,659)	21.6	9.424 (10.186)	

주: 수급지위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 우울은 2006년 11월 1일~12월 30일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는 우울과 수급지위 변화의 종단적 관계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4>를 보면 2005년말 비수급자 10,446명의 2006년말 우울점수는 8.678이고, 수급자 518명은 21.317점으로 수급자의 우울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그렇다면 종단적으로 수급지위 변화는 우울수준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2005년말 비수급자의 변화부터 추적해 보자.

2005년말 비수급자 중 2006년말에도 비수급을 지속한 10,360명의 두번째 우울점수는 8점 후반대에 서 유지되지만, 수급에 진입한 85명의 두번째 우울점수는 19.106으로 높아졌다. 또한 2005년말~2006년말에 비수급을 지속한 10,360명 중 2007년말에 수급에 진입한 54명의 세번째 우울점수 역시 14.394로 높아졌다. 그리고 2006년말에 수급에 진입한 85명 중 2007년말에 수급에서 벗어난 12명의 세번째 우울점수는 10.330으로 낮아졌다. 즉, 전반적으로 수급에 진입한 후 우울수준이 높아지고 수급에서 탈

출한 후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4〉 수급지위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의 변화

수급지위	우울점수 평균 (표준편차)	수급지위	우울점수 평균 (표준편차)	수급지위	우울점수 평균 (표준편차)
2005년 12월 31일	2006년 11월 1일~12월 30일	2006년 12월 31일	2007년 4월 25일~7월 19일	2007년 12월 31일	2008년 4월 13일~7월 10일
비수급 (10,446명)	8.678 (9.498)	비수급 (10,360명)	8.613 (9.343)	비수급 (10,307명)	7.715 (8.494)
				수급 (54명)	14.394 (11.727)
		수급 (85명)	19.106 (13.377)	비수급 (12명)	10.330 (10.344)
				수급 (73명)	16.174 (13.236)
수급 (518명)	21.317 (13.523)	비수급 (41명)	18.442 (13.382)	비수급 (30명)	16.699 (12.395)
				수급 (11명)	13.588 (8.084)
		수급 (477명)	18.819 (13.178)	비수급 (24명)	13.539 (10.442)
				수급 (453명)	17.056 (12.411)

다음으로 2005년말 수급자의 변화를 추적해 보자. 이들 중 2006년말에 수급에서 벗어난 41명과 수급을 지속한 477명의 우울점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비수급자에서와는 달리 한번 수급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06년말 수급 탈출 집단 41명 중에서 2007년말 비수급을 지속한 30명보다 수급에 재진입한 11명의 우울점수가 오히려 더 낮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는 빈곤에서 탈출하지 않고 행정적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빈곤층이 수급에 재진입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감소하여 우울수준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해석은 수급지위 변화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의 관계를 가정한 상태에서의 해석인데, 우울수준이 수급지위의 변화 양상을 결정한다는 역방향의 관계를 가정하면 다른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말에 수급에 진입한 85명은 수급진입으로 인해 우울점수가 8.678에서 19.106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2005년말 비수급자 중 우울수준이 이미 높았던 개인이 선택적으로 2006년말에 수급에 진입했을 수도 있다. 즉, 〈표 4〉에 제시된 우울수준의 변화는 실제로 각 개인의 우울수준이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각 집단의 구성(composition)에 의해 나타난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기술적 분석은 다음 장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통제하는 다변인 분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 5>에서는 우울수준이 수급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을 가정하고, 초기 우울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나누어 시간에 따라 수급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울수준이 낮은 집단 중 2006년말 수급자인 비율은 2.5%인 반면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은 14.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수준이 낮은 2006년말 수급자의 2007년말 수급탈출 비율은 9.8%인 반면 우울수준이 높은 수급자는 5.6%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7년말 수급진입 비율 역시 우울수준이 낮은 집단이 0.3%로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의 2.3%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의 수급탈출 가능성이 낮고 수급진입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5> 우울수준에 따른 수급지위의 변화

우울점수	수급지위		수급지위	
2006년 11월 1일~12월 30일	2006년 12월 31일		2007년 12월 31일	
우울점수가 16 미만인 집단 (9,142명)	비수급	8,916명 (97.5%)	비수급	8,891명 (99.7%)
			수급	25명 (0.3%)
	수급	226명 (2.5%)	비수급	22명 (9.8%)
			수급	204명 (90.2%)
우울점수가 16 이상인 집단 (2,517명)	비수급	2,141명 (85.1%)	비수급	2,093명 (97.7%)
			수급	49명 (2.3%)
	수급	376명 (14.9%)	비수급	21명 (5.6%)
			수급	355명 (94.4%)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우울수준의 증가는 수급진입과, 우울수준의 감소는 수급탈출과 상호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분석으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탐색적인 수준의 해석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변인분석으로 우울과 수급지위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 1) 수급진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첫번째 연구문제는 수급진입이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2006년말 비수급자 중 독립변수가 모두 조사된 10,261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 중 0.6%인 66명이 2007년말에 수급에 진입하였다. 66명 중 42명은 비빈곤상태에서 수급진입하였고, 24명은 빈곤상태에서 수급진입하였다.

<표 6>의 모형1을 보면 수급진입이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수급진입자는 비수급지속자보다 평균적으로 우울점수가 2.387만큼 높았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변수가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12월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2006년에 빈곤한 경우가 빈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노인이 청년에게 비해, 고졸 미만이 고졸 이상에 비해, 신체건강이 나쁜 사람이 나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2008

년 4~7월 우울수준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대체로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강상경·권태연(2008)의 연구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취업형태를 보면, 비취업자에 비해 상용직은 우울수준이 낮지만 임시·일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는 오히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시·일용직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나,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수준이 불안정한 영세자영업과 같은 일자리가 비취업 상태보다도 더 우울수준을 높일 정도로 취약한 일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수급진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S.E)	B (S.E)
상수		4.902 (0.354) ***	5.039 (0.353) ***
2006년 11~12월 우울		0.248 (0.009) ***	0.252 (0.009) ***
수급진입1 (기준: 비수급지속)	수급진입	2.387 (0.972) *	
수급진입2 (기준: 비수급지속)	비빈곤상태에서 진입 빈곤상태에서 진입		3.892 (1.211) ** 0.428 (1.604)
빈곤지위 (기준: 비빈곤)	빈곤	1.281 (0.300) ***	
성 (기준: 남성)	여성	0.563 (0.169) ***	0.542 (0.169) **
연령 (기준: 청년)	중장년	0.177 (0.219)	0.174 (0.219)
	노인	0.885 (0.312) **	1.023 (0.310) ***
교육수준 (기준: 고졸 미만)	고졸 이상	-1.121 (0.217) ***	-1.197 (0.217) ***
신체건강상태 (기준: 나쁘지 않음)	나쁨	3.042 (0.237) ***	3.105 (0.238) ***
결혼지위 (기준: 유배우)	무배우	0.980 (0.201) ***	0.977 (0.201) ***
6세 이하 아동 (기준: 없음)	있음	0.420 (0.226) +	0.390 (0.226) +
취업형태 (기준: 비취업)	상용직	-0.447 (0.210) *	-0.518 (0.209) *
	임시·일용직	0.679 (0.267) *	0.624 (0.267) *
	고용주·자영업자	0.476 (0.235) *	0.476 (0.235) *
R2 / F		0.171 / 162.912 ***	0.170 / 161.499 ***
N		10,261	10,261

주: \*\*\* p<.001 \*\* p<.01 \* p<.05 + p<.10

모형2에서는 수급진입의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빈곤상태에서의 진입과 빈곤상태에서의 진입을 구분하면 논리적으로 2006년의 빈곤지위를 따로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빈곤지위 변수는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비빈곤상태에서의 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 반면, 빈곤

상태에서의 진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진입자의 우울수준 증가의 상당부분은 빈곤진입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급진입 자체가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별개로 우울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빈곤상태에서의 수급진입이 우울수준을 증가시키지도 않지만 감소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면, 급여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감 효과가 수급에 따르는 스티그마로 인해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2) 수급탈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두번째 연구문제는 수급탈출이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2006년말 수급자 중 독립변수가 모두 조사된 948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 중 6.5%인 61명이 2007년말에 수급에서 탈출하였다. 61명 중 51명은 수급탈출 후 빈곤하지 않았고, 10명은 수급탈출 후 여전히 빈곤하였다.

〈표 7〉의 모형1을 보면, 수급탈출의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아도 전반적으로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표 6〉에 비해 유의한 변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의 사례수가 훨씬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수급을 경험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변수들의 변이(variation)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취업형태의 효과를 보면, 〈표 6〉에서는 고용주·자영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는데, 〈표 7〉에서는 고용주·자영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자영업자가 비수급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갖지만, 수급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모형2에서는 수급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경우와 여전히 빈곤한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수급탈출의 회귀계수 크기와 방향이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지속자에 비해 우울수준이 감소한다( $p < .10$ ). 반면 탈출 후 빈곤한 경우는 사례수가 10명에 불과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5.048로 우울수준을 상당히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수급기간 제한이나 제재 강화 등 부정적 정책수단을 통해 행정적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수급자의 우울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수급탈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S.E)	B (S.E)
상수		7.030 (1.557) ***	7.016 (1.555) ***
2006년 11~12월 우울		0.311 (0.029) ***	0.308 (0.029) ***
수급탈출1 (기준: 수급지속)	수급탈출	-1.543 (1.492)	
수급탈출2 (기준: 수급지속)	탈출 후 비빈곤 탈출 후 빈곤		-2.904 (1.631) + 5.048 (3.551)
빈곤지위 (기준: 비빈곤)	빈곤	1.777 (0.773) *	1.568 (0.778) *
성 (기준: 남성)	여성	1.236 (0.793)	1.265 (0.792)
연령 (기준: 청년)	중장년	1.731 (1.190)	1.822 (1.189)
	노인	0.452 (1.335)	0.593 (1.334)
교육수준 (기준: 고졸 미만)	고졸 이상	-0.043 (0.958)	0.114 (0.960)
신체건강상태 (기준: 나쁘지 않음)	나쁨	3.000 (0.854) ***	3.047 (0.853) ***
결혼지위 (기준: 유배우)	무배우	-0.277 (0.804)	-0.320 (0.803)
6세 이하 아동 (기준: 없음)	있음	-0.891 (1.186)	-1.008 (1.185)
취업형태 (기준: 비취업)	상용직	-4.130 (1.616) *	-4.075 (1.614) *
	임시·일용직	-1.364 (1.044)	-1.291 (1.043)
	고용주·자영업자	-4.578 (1.449) **	-4.628 (1.446) **
R2 / F		0.225 / 20.809 ***	0.228 / 19.687 ***
N		948	948

주: \*\*\* p<.001 \*\* p<.01 \* p<.05 + p<.10

### 3) 우울이 수급진입에 미치는 영향

세번째 연구문제는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키는지 하는 것이다. 2006년말 비수급자 중 독립변수가 모두 조사된 10,668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 중 0.7%인 71명이 수급에 진입하였다. 71명 중 45명은 비빈곤상태에서 수급진입하였고, 26명은 빈곤상태에서 수급진입하였다.

〈표 8〉의 모형1을 보면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수급진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p<.001). 그런데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이 청년에 비해 수급진입확률이 낮은 것은(p<.05) 언뜻 여성과 노인이 전통적으로 빈곤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횡단적인 전체 수급자의 특성과 종단적인 수급진입자의 특성은 상당히 다르다. 수급진입의 경우

에는 전통적인 취약계층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등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진입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구인회 외, 2008). 즉,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전통적인 취약계층은 정체된 수급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급진입확률과 수급탈출확률이 모두 낮고, 근로능력이 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은 수급진입확률과 수급탈출확률이 모두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형태의 영향을 보면, 비취업자에 비해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의 수급진입확률은 낮지만(p<.01), 임시·일용직은 비취업자와 수급진입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빈곤층의 수급진입 가능성이 비취업자와 유사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우울이 수급진입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전체 수급진입 /비수급지속	비빈곤상태에서 진입/비수급지속	빈곤상태에서 진입/비수급지속
		B (S.E)	B (S.E)	B (S.E)
상수		-4.574 (0.518) ***	-5.150 (0.605) ***	-4.705 (0.842) ***
2006년 11~12월 우울		0.050 (0.009) ***	0.060 (0.011) ***	0.045 (0.015) **
빈곤지위 (기준: 비빈곤)	빈곤	1.222 (0.280) ***		
성 (기준: 남성)	여성	-0.581 (0.254) *	-0.592 (0.313) +	-0.663 (0.415)
연령 (기준: 청년)	중장년	-0.355 (0.399)	0.003 (0.430)	-1.191 (0.739)
	노인	-1.087 (0.480) *	-0.453 (0.550)	-1.747 (0.796) *
교육수준 (기준: 고졸 미만)	고졸 이상	-0.907 (0.356) *	-0.590 (0.409)	-2.077 (0.709) **
신체건강상태 (기준: 나쁘지 않음)	나쁨	0.340 (0.299)	-0.331 (0.404)	1.531 (0.529) **
결혼지위 (기준: 유배우)	무배우	0.308 (0.268)	0.443 (0.318)	0.059 (0.431)
6세 이하 아동 (기준: 없음)	있음	0.184 (0.394)		
취업형태 (기준: 비취업)	상용직	-1.650 (0.546) **	-1.639 (0.488) ***	-1.273 (0.642) *
	고용주·자영업자	-1.281 (0.493) **		
	임시·일용직	0.235 (0.314)		
X <sup>2</sup> (df)		129.139 (12) ***	128.128 (18) ***	
N		10,668	10,668	

주: \*\*\* p<.001 \*\* p<.01 \* p<.05 + p<.10

모형2에서는 수급진입을 비빈곤상태에서의 진입과 빈곤상태에서의 진입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에 2006년 빈곤지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빈곤지위 변수는 제외하였다.<sup>4)</sup> 분석 결과, 높은 우울수준이 비빈곤상태에서의 수급진입확률과 빈곤상태에서

의 수급진입확률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상태에서의 수급진입 확률도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시스템의 행정절차가 우울수준이 높은 빈곤층의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정도로 복잡하거나 엄격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우울수준이 높은 빈곤층은 공공부조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수급에 진입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 우울이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 연구문제는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확률을 감소시키는지 하는 것이다. 2006년말 수급자 중 독립변수가 모두 조사된 98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 중 7.8%인 71명이 수급에서 탈출하였다. 71명 중 51명은 수급탈출 이후 빈곤하지 않았고, 20명은 수급탈출 이후 여전히 빈곤하였다.

모형1을 보면, 우울수준은 수급탈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른 변수들의 경우에도 <표 8>에서 수급진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작았다. 이는 비수급 집단에서 수급진입자와 비수급지속자의 특성 차이는 크지만 수급 집단에서 수급탈출자와 수급지속자의 특성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그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2006년의 빈곤, 연령, 취업형태가 있다. 연령의 경우에는 청년에 비해 중장년과 노인의 수급탈출확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p < .10$ ), 이는 앞서 청년이 수급진입확률이 높지만 수급탈출확률도 높다고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 취업형태를 보면, 비취업자에 비해 고용주·자영업자의 수급탈출확률이 높지만 상용직은 비취업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용직과 같이 고용이 안정적인 일자리는 수급탈출 경로로 작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2에서는 수급탈출의 성격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울수준은 탈출 후 빈곤한 수급탈출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탈출 후 빈곤한 수급탈출(탈락)확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즉, 높은 우울수준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시스템이 복지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관료적 자격박탈 시스템'의 성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표 7>의 결과는 공공부조 시스템이 우울수준이 높은 빈곤층의 진입을 막지는 않음을 시사하지만, 일단 수급에 진입한 후에는 우울수준이 높은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수급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4) 빈곤상태에서 진입한 26명 중 아동이 있는 경우와 상용직인 경우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동 변수는 제외하였고, 상용직 범주는 수급진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고용주·자영업자 범주와 묶어서 분석하였다.

〈표 9〉 우울이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전체 수급탈출 /수급지속		탈출 후 비빈곤 /수급지속	
		B (S.E)		B (S.E)	
상수		-2.122 (0.496) ***		-3.283 (0.624) ***	
2006년 11~12월 우울		-0.002 (0.010)		-0.020 (0.013)	
빈곤지위 (기준: 비빈곤)	빈곤	-0.797 (0.321) *		-1.593 (0.471) ***	
성 (기준: 남성)	여성	0.145 (0.271)		0.268 (0.328)	
연령 (기준: 청년)	중장년	-0.666 (0.357) +		0.141 (0.449)	
	노인	-0.801 (0.446) +		0.081 (0.552)	
교육수준 (기준: 고졸미만)	고졸 이상	0.363 (0.320)		0.589 (0.371)	
신체건강상태 (기준: 나쁘지 않음)	나쁨	0.084 (0.301)		0.427 (0.349)	
결혼지위 (기준: 유배우)	무배우	-0.175 (0.277)		0.182 (0.335)	
6세 이하 아동 (기준: 없음)	있음	-0.489 (0.404)		-0.096 (0.469)	
취업형태 (기준: 비취업)	상용직	0.555 (0.432)		0.419 (0.561)	
	임시·일용직	0.424 (0.351)		0.681 (0.394) +	
	고용주·자영업자	1.223 (0.410) **		1.316 (0.472) **	
X2 (df)		35.569 (12) ***		78.125 (24) ***	
N		989		989	

주: \*\*\* p<.001 \*\* p<.01 \* p<.05 + p<.10

다른 변수를 살펴보면, 탈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취업형태가 탈출 후 비빈곤한 수급탈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직도 비취업자에 비해 탈빈곤적 수급탈출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p<.10)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라 해도 일단 취업하는 것이 수급탈출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탈출 후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경우에는, 청년에 비해 중장년과 노인의 탈출확률이 낮고(p<.01), 유배우자에 비해 무배우자의 탈출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 탈출 후 비빈곤한 탈빈곤적 수급탈출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하여 취업형태와 같이 근로소득능력과 관계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탈출 후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경우에는 그 성격과 영향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수급탈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기초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횡단적으로 비수급 집단과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이 현저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급자의 정신건강 특성이 비수급자와 동일하다고 전제한 후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에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탈수급 정책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우울과 수급지위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에 요약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수급진입과 우울은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급탈출과 우울은 서로에게 그다지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ichols-Casebolt(1986)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수급탈출의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탈빈곤을 동반하는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고,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탈출 후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분석 결과의 요약

이론적 관점	분석 결과
사회적 원인 (social causation)	수급진입이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p<.05$ ) 비빈곤상태에서의 진입이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p<.01$ ) 빈곤상태에서의 진입이 우울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이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수급탈출이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p<.10$ ) 탈출 후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이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사회적 선택 (social selection)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p<.001$ ) 높은 우울수준이 비빈곤상태에서의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p<.001$ ) 높은 우울수준이 빈곤상태에서의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p<.01$ )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높은 우울수준이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수급탈출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높은 우울수준이 탈출 후 빈곤한 수급탈출(탈락)확률을 증가시킨다( $p<.05$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급 집단의 높은 우울수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수급탈출보다는 수급진입과의 관계에 의해 주로 설명된다. 우울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급에 진입하고, 또한 수급에 진입하면 우울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높은 우울수준을 가진 빈곤층이 수급 집단에 집중되기 쉬워 수급층이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비해서도 정신건강 상태가 취약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울과 수급지위 변화의 연쇄적 흐름에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이 빈곤해져서 수급에 진입한다. 일단 수급에 진입하면 또다시 우울수준이 증가하고, 증가한 우울수준은 이어서 탈출 후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급탈락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탈빈곤

을 동반하는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다시 감소시키지만,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급탈출(탈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회귀계수의 크기와 방향으로 판단할 때) 오히려 우울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수급탈락자의 우울수준이 높아지면, 이번에는 높은 우울수준으로 인해 다시 수급재진입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은 공공부조 수급진입과 탈출, 재진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수급층이 형성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미국에는 이미 공공부조 수급층이 장기수급층(long-termer)와 단기수급층(short-termer), 반복수급층(cycler)의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Bane and Ellwood, 1994). 이 중 반복수급층의 일부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약한 정신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통한 탈빈곤에는 이르지 못하고 공공부조 시스템의 주변을 맴도는 집단으로 전략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반복수급층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초보장제도는 미국 AFDC에 비해 장기수급층의 비중이 크고 반복수급층의 비중이 상당히 작은 특징을 갖는다(강신옥 외, 2006). 하지만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빈곤한 집단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전통적인 빈곤층이 주로 장기수급층을 형성하는 한편 근로빈곤층은 반복수급층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수급탈출확률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급에 진입한 근로빈곤층이 반복수급층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급기간 제한이나 제재의 강화와 같이 수급탈출을 강제하는 부정적인 정책수단이 도입될 경우 반복수급층의 등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탈수급 정책의 기본방향은 부정적 정책수단을 이용한 강제적 탈락보다는 실질적인 탈빈곤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이원진, 2010). 특히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볼 때, 강제적인 수급탈락보다는 탈빈곤을 통한 자연스러운 수급탈출이 우울과 수급의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한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수급진입확률은 높인다는 결과는, 정신건강이 취약한 수급자를 표적화하는 사후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광범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급진입을 예방하는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참여자의 우울과 알코올 문제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를 상위 자활 프로그램으로 이동시키거나 탈수급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서동우 외, 2002). 이는 수급자의 우울 문제를 개선시켜 수급탈출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수급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재활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는 그 자체로 추진해야 하지만,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탈수급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수급진입예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구인회 외, 2008). 요컨대, 이미 수급에 진입하면서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된 수급자의 정신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입에만 주력하기보다는,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일반이나 폭넓은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수급진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스티그마를 동반하는 자산조사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엄격한 수급자격요건과 절차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더이상 빈곤정책을 공공부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EITC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공공부조 프로그램 외부에서 빈곤층에게 소득,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접근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차를 이용하여 시간순서를 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가 모두 적절히 모형에 포함되었음을 보장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조사 문항이 제한된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울 외 다른 심리·정서적 변수가 수급지위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oley and Prause, 2002)는 점은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가 측정되는 시점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지체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독립변수가 2006년말 수급진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07년말 수급진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의 모형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셋째, 분석에 포함된 전체 사례수는 충분한 편이지만 일부 분석에서 수급지위 변화의 유형별로 사례수가 작은 경우가 있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고, 추후 더 많은 시점의 패널 자료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동태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후속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3-50.
- 강상경·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32-355.
- 강신욱·이현주·구인회·신영전·임원섭. 200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동태 및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강병구·이현주·안서연·이원진. 2008. 『탈수급 및 수급예방을 위한 공공부조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미곤·여유진·김태완·송치호·오지현·임미진. 2008.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인숙. 1992. “도시빈곤가족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와 사회 스트레스(social stress) 모델의 유용성”. 『사회복지연구』 4(1): 27-56.
- 박능후·유진영·임원섭·백학영. 2004.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 박상규. 2001.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민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의 평

- 가와 전망.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개교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박상규·이병하. 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 박영란·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 백학영·고미선.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 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83-114.
- 서동우·이선혜·김윤희·노대명·이용표·황태연·이선영·강서이. 200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효과제고 방안 연구: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명숙. 2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신건강실태와 재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21: 105-136.
- 이상문. 2008.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2(3): 119-152.
- 이용표. 2001. “알코올중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정신건강 특성, 주관적 삶의 질 및 서비스 욕구에 관한 비교 연구: 자활사업의 재활프로그램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2): 5-12.
-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2(3): 5-29.
-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 이태진·홍경준·김태완·최현수·김문길·김선미·김사현·최옥금·우선희·김효진·강성민. 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 Bane, M., and D. Ellwood. 1994. *Welfare Realities: From Rhetoric to Refor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nziger, S., M. Corcoran, S. Dnazier, C. Heflin, A. Kalil, J. Levine, D. Rosen, K. Seefeldt, K. Siefert, and R. Tolman. 2002.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 Recipients.” *PSC Reaserch Report* No. 02-508.
- Danziger, S., A. Kalil, and N. J. Anderson. 1998. “Human Capital, Health and Mental Health of Welfare Recipients: Co-occurrence and Correlates.”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37-656.
- Dohrenwend, B. P. 1990. “Socioeconomic Status(SES) and Psychiatric Disorders: Are These Issues Still Compell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41-47.
- Dohrenwend, B. P., and B. S. Dohrenwend. 1981. “Socioenvironmental Factors, Stress, and Psychopat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2): 128-164.
- Dooley, D., and J. Prause. 2002. “Mental Health and Welfare Transitions: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in AFDC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6): 787-813.
- Faris, R. E. L., and H. W. Dunham. 1939. *Mental Disorders in Urban Areas: An Ecological Study of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ses*. Chicago University Press.
- Jayakody, R., S. Danziger, and H. Pollak. 2000. “Welfare Reform,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25(4): 623-650.



- Kalil, A., C. E. Born, J. Kunz, and P. J. Caudill. 2001. "Life Stressors,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First-Time Welfare Recipi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2): 355-369.
- Kalil, A., H. A. Schweingruber, and K. S. Seefeldt. 2001. "Correlates of Employment Among Welfare Recipients: D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Matt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5): 701-723.
- Kalil, A., M. E. Corcoran, S. Danziger, R. Tolman, K. S. Seefeldt, D. Rosen, and Y. Nam. 1998. "Getting Jobs, Keeping Jobs, and Earning a Living Wage: Can Welfare Reform Work?"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170-98.
- Kaestner, R. 1998. "Drug Use and AFDC Participation: Is There a Connec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7(3): 495-520.
- Kuruville, A., and K. S. Jacob. 2007. "Poverty,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126: 273-278.
- Lewis, D. A., B. J. Lee, and L. M. Altenbernd. 2006. "Depression and Welfare Reform: From Barriers to Inclu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4): 415-433.
- Lipsky, M. 1984. "Bureaucratic Disentitlement System in Social Welfare Programs." *Social Service Review* 58: 3-27.
- Metsch, L. R., and H. A. Pollak. 2005. "Welfare Reform and Substance Use." *The Milbank Quarterly* 83(1): 65-99.
- Moffit, R. 1983. "An Economic Model of Welfare Stigm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3(5): 1023-1035.
- Montoya, I. D., D. C. Bell, J. S. Atkinson, C. W. Nagy, and D. D. Whitsett. 2002. "Mental Health, Drug Use, and the Transition from Welfare to Work."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and Research* 29(2): 144-156.
- Nichols-Casebolt, A. 1986.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Income Testing Income-Support Benefits." *Social Service Review* 60(2): 287-302.
- Schmidt, L., D. Dohan, J. Wiley, and D. Zabkiewicz. 2002. "Addiction and Welfare Dependency: Interpreting the Connection." *Social Problems* 49(2): 221-241.
- Schmidt, L., C. Weisner, and J. Wiley. 1998. "Substance Abuse and the Course of Welfare Dependenc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11): 1616-1622.
- Siefert, K., P. J. Bowman, C. M. Heflin, S. Danziger, and D. R. Williams. 2000. "Social and Environmental Predictors of Maternal Depression in Current and Recent Welfare Recipi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4): 510-522.
- Timms, D. W. G. 1996. "Social Mobility and Mental Health in a Swedish Cohor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1: 38-48.
- Zabkiewicz, D., and L. A. Schmidt. 2007. "Behavioral Health Problems as Barriers to Work: Results from a 6-year Panel Study of Welfare Recipients."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34(2): 168-185.

## Depression and Welfare Transition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Lee, Won-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welfare transition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From a social selection perspective, prior high levels of depression are likely to select people into welfare or serve as a barrier to leaving welfare. From a social causation perspective, entering or exiting welfare can change the levels of depression. Thes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KOWEPS(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5~2007.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ntering welfare clearly increases the levels of depression. The increased economic stress resulting from falling into poverty seems to play a major role in the negative effect of welfare entry. Second, exiting welfare does not decrease the levels of depression. However, when welfare exits are classified into distinctive categories, welfare exit combined with concurrent poverty exit is likely to decrease the levels of depression. Third, high levels of depression clear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entering welfare regardless of the prior poverty status. Fourth, high levels of depression do not decrease the probability of exiting welfare, but rather increase the probability of an administrative disqualification which leads to even worse economic conditions after exiting welfare. On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that negative policies such as time limit and strengthening sanctions can increase the number of welfare cyclers who are able-bodied but mentally weak.

Key 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depression, welfare entry, welfare exit

[논문 접수일 : 10. 06. 17, 심사일 : 10. 07. 09, 게재 확정일 : 10. 08. 05]